

野 “지방정부 부담 증가” 주장에 李 “재정 여력 8.4조 늘어” 반박

“지원금 사업, 강제 아닌 선택사항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하는 것”
與 “사실 왜곡, 정치 선동”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해 지방 정부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말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해당 내용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정부 부담 비율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부담률인 10%(서울은 25%)에서 20%(서울은 30%)로 높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 줄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면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시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을 넘어선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지방에 약 9조7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실제 부담은 1조3000억원에 그친다”며 이 대통령과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숫자만 놓고 봐도 성립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민생 지원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뿐”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지방 부담’ 운운하는 태도는 더 노골적”이라며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책임지고, 참여 여부도 자율인 사업을 두고 부담을 핑계 삼는 것은 사실상 지원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가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조차, 국민의힘은 해법 대신 숫자 왜곡과 불안 조장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해결할 의지도, 책임질 준비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남기고 있는 것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는 기록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주호영·이진숙 무소속 출마 기류… 대구시장 4파전 가나

주호영, 가처분 신청 이의제기 예정
이진숙, 무소속 출마 의지 시사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막판까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당세가 가장 강하다는 대구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보의 무소속 출마 변수로 4파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의장은 오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한 공천배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다. 앞서 남부지법은 지난 3일 주호영 부의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구시장 후보를 6인 경선을 통해 정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컷오프된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주 부의장은 오는 8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주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 또는 컷오프 수용 중 입장을 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앞서 주



왼쪽부터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부의장은 지난 3일 남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역시 “시민경선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며 사실상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2명의 무소속 출마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진다.

만일 보수 분열이 현실화되면 국민의힘은 사상 처음으로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주 부의장이 당에 남아 선거를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다면 이 전 위원장 역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명분이 약해져서다.

여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전 위원장에게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대구도 이진숙 후보를 필요로 하겠지만, 당은 이 후보를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와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준다면 더 국민에 큰 기여를, 더 빛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국회 추경 26조 심사 돌입 여야 ‘삭감 vs 원안’ 충돌

여야 모두 추경 통과 필요성은 공감
삭감규모 따라 합의 vs 단독 갈릴 듯
이 대통령, 오는 7일 여야 대표 회동

국회가 이번 추경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처리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속도를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표 행위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있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8일 추경안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8~9일엔 소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추경안 본회의 통과 자체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예결위 협상에서 국민의힘 요구가 어디까지 반영되느냐에 따라 ‘합의 처리’와 ‘여당 단독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중 현금성 지원 등에 대해 대규모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4조8252억원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석유비축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국제정체납관리단 예산 등 6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들을 모두 삭감하고 ▲현행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지원(4398억원)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3000억원) ▲자영업

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1358억원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 아닌 광범위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한정에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며 “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또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 확대, K-패스 정책제 인하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포함한 5대 증액사항을 추진한다”며 ▲고유가 사각지대 지원 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여야정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동을 통해 이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조승래 “지선에 대통령 팔이 용납 못 해”

〈민주당 사무총장〉

‘李 사진·영상 활용 금지’ 공문 발송
친명계 “지침 즉각 철회하라” 반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이미지 등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것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과거 영상을 활용해) 지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의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사·도당에 두 차례 발송한 바 있다.

첫 공문에서 중앙당은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공문을 재발송하고 “기준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준에 각 후보가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의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홍보에 활용해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엄중히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는가”, “중앙당의 재고를 촉구한다”,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반발이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5일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 발표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년 전) 영상에 대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게재하면, 마치 지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